

한국의 방위장비품 수출확대에의 관정¹

- 1990년 전후의 수출 저해 요인을 중심으로 -

이토 코타로 (伊藤 弘太郎)

일반재단법인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원

연구기간 : 2018년 8월 1일~2018년 9월 15일

수입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¹ 본 펠로십에 의한 연구성과는 본 보고서와는 별개로 2018년 9월에 간행된 일반재단법인 안보무역정보센터 『CISTEC 저널(No.177)』 게재 "한국 방위장비수출확대와 향후 과제"로서 발표했다.

요 지

한국의 방위산업은 2000년대 이후는 자국군의 수요에 걸맞은 뿐 아니라 외국으로 장비를 수출하는 자세가 뚜렷했다. 한국산 장비의 해외 수출액은 이명박정부부터 급증하고 노무현정부 때 2006년에는 약 2.5억달러였던 수출액이 10년 후 박근혜 정권기의 2016년에는 10배의 약 25억달러까지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약진하는 모습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70년 전 한국에는 방위 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조달하지 못 했다.한국 전쟁 개전 후 3일 지나지 않아 북한군의 수도 서울 함락을 허용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련에서 공여된 전차 등으로 중무장한 북한군에 대해서 한국군은 미국의 필요 최소한의 장비 밖에 없었던 것이 큰 요인이었음은 말할필요도 없다. 한국전쟁 후에도 진흙탕이 되는 베트남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을 제쳐놓고 북한으로부터의 거둬들인 군사도발을 받은 한국은 자국이 요구하는 질과 양을 각각 충족한 방위력 정비를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으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주국방정책'을 추진기로 결정했다.

"한강의 기적"에 의해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 경제발전을 실현함으로써 북한과의 경제력 차이를 역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 측면에서도 한국군은 미국 등에서 최신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장비의 근대화와 전력향상을 실현해 왔다. 또, 한국은 자국내에서 장비품을 생산해,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착실하게 획득해 온 것이다.그렇지만, 한국군에 대한 조달에 의한 국내 수요가 안정되자, 일변하여 방위산업 전체의 가동률이 저하한다고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시장 진출을 시도하지만 때마침 냉전붕괴로 야기된 평화무드 고조와 세계적인 경기후퇴의 물결에 따라 각국의 국방예산 삭감 경향은 두드러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방위산업도 국제적인 생존경쟁에 시달리는 가운데 기업합병이나 국제공동개발 추진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방위산업도 예외 없이 영향을 크게 받게 된 것이다.

또 한국의 수출 저해 요인이 된 것은 한국 장비 중에 미국 기술에 유래하는 부품이 나타날 경우 한국이 장비를 제3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대미 승인"이 장비 수출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던 것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동맹국인 미국의 기술지원에 의해 발전해 왔지만, 한국 방위산업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에 의한 기술이전 승인의 필요성이 높은 벽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어 1991년에 일어난 걸프 전쟁이 최신무기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유도무기와 같은 첨단무기기술 개발력에 부족한 한국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바로 고통스러운 시대였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시장 참가를 적극적으로 완수하게 되려면, 방위 사업청을 출범시킨 노무현 정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삼성등이 최첨단의 전자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기까지의 기술력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술면에서의 자신감을 방위산업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자국만의 단독 개발 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의 국제 공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장비품 수출확대への 관심

- 1990년 전후의 수출 저해 요인을 중심으로 -

- 목차 -

1. 머리말
2. 선행연구 평가
3. 냉전 체제 붕괴 전후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
 - (1) 국내 정치와 한미 관계의 변화
 - (2) 남북관계의 변화
 - (3) 전쟁 형태의 변화
4. 80년대 후반 한국 방위 산업을 둘러싼 문제점
 - (1) 방위산업 생산라인의 가동을 저하
 - (2)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
 - (3) 장비품 수출시 대미 승인 필요성
5. 맺는 말

1. 머리말

한국의 방위산업은 탄생부터 4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한 시점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한국군은 소총 등 기본적인 장비 뿐 없이 자신이 보유한 군사력만으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군은 미국의 군사 고문단의 지원으로 미 군정기(1945년~48년) 남조선 국방 경비대를 모체로 창단됐지만 한반도에서 철수한 일본군은 아무것도 장비를 남기지 않아 국방경비대 창설 당초부터 자기 무기를 조달하지 못하고 일본군 대신 주둔한 미군에서 소총 등의 무기, 차량, 함정 등의 장비의 공여를 받았고 군대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한다.² 그 뒤 19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되자 3일도 안 돼서 서울함락을 허용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련에서 전차 등의 장비를 공여된 북한군에 대해서 미국에서 필요최소한의 장비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컸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의 지원으로 국가의 독립을 사수했다. 한국전쟁 휴전 후에는 1953년 7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왔다.

한국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경제발전을 실현함으로써 북한과의 경제력 차이를 역전시키고 현재도 그 힘의 차이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군사력도 그 구성요소 중 하나인 장비품에만 초점을 맞추면 한국군은 미국 등에서 최신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장비의 근대화와 전력향상을 실현해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비면에서 북한군과의 능력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국은 자국내에서 장비품을 생산해,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착실하게 획득해 왔다. 2000년대 이후는 자국군의 수요에 걸맞은 뿐 아니라 외국의 장비를 수출하는 자세가 뚜렷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제트 훈련기(T-50)과 잠수함 등 대형수주 안건의 성

² 국방부군사첩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2013년, p.33

공을 대표격에 유럽, 남미까지 세계각국에 그 사업을 확대시킨 약진에 세계의 방위산업관계자로부터 주목이 모였다. 한국산장비의 연간 해외수출액은 이명박정부부터 급증하고 노무현정부 때 2006년에는 약 2.5억달러였던 수출액이 10년후 박근혜정부기의 2016년에는 10배의 약25억달러까지 도달한 것이다 (2014년에는 과거 최대인 약 36억달러를 기록했다).³

최근에는 수출하는 장비품목에도 변화가 보이며 아직 수출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20년전에는 탄약과 군용 차량 등의 기본적인 장비가 수출품목의 주류인 반면 이 10년에 항공기와 함정 등의 대형장비만 아니라 최첨단전자기기를 사용한 첨단무기나 무인기까지 품목이 늘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한번의 계약 성공으로 얻는 금액의 규모가 커져 대통령이 스스로가 세일스 상대국의 국가원수에 직접 판매를 꾀하는 "톱세일스"가 당연한 것처럼 행해진 지 오래다. 대통령이 외유할 때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외교의 중요의제 중 하나로 "방위산업 협력"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는 1970년대 초창기 198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성장하면서 냉전체제가 붕괴된 90년전후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추진력을 잃었다. 냉전체제 붕괴 전후 한국은 국내외 환경변화의 물결이 단속적으로 몰린 때에 국내정치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소장(당시)의 군사쿠데타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선언까지 약30년 된 군사독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라는 심한 사회변화 중에 있었다. 국제정치는 80년대후반부터 90년대초반까지 1989년 독일 베를린장벽 붕괴, 91년 소련붕괴 등 일련의 냉전붕괴 전후의 역사적 사건이 연속 일어났다. 그 후의 냉전붕괴에 의해서 초래된 평화무드의 고조와 세계적인 경기후퇴의 물결에 의해서 각국의 국방예산의 삭감경향은 현저해 졌고, 각국의 방위산업은 국제적인 생존경쟁 속에서 기업합병이나 국제공동개발의 추진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방위산업도 예외 없이 영향을 크게 받게 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이 현재 같은 장비수출확대에 이르면서 냉전체제 붕괴 전후의 1990년 전후의 정체기의 원인을 밝힌다.그런 다음, 당시의 한국 방위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가 방위산업의 수출 적극책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2. 선행연구 평가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연구는 그 초창기인 1970년대 박정희정부가 추진한 자주국방정책 연구 중의 한 예로서 소개되는 형태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최근의 방위산업 약진과 방위장비품 수출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 지향적인 것, 혹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나 제도 설계, 혹은 방위장비품의 효율적 획득 방법 등 실무적인 사안에 기초한 연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이른바 업계지원단체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발행하는 『국방과 기술』이라는 월간지가 1979년 1월 이후 방위산업 관계자(국방부·군·학·민)의 논고나 방위산업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후자의 대표적인 것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펴낸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과 역사"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한국 방위 산업의 역사를 정리되어 있는 개설서이다. 또 국방부에서 23년 방위 산업 관련 업무를 지낸 정진테에 의해서 쓰여진 "방위사업학 개론"은 방위산업의 역사에서 산업 구조 발전을 위한 제도 설계 등 실무적인 내용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이다. 이외에도 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팀이 작성한 "한국 방위산업 40년 발전과정과 성과"등이 있다. 이 에 덧붙여 방위산업진흥회에 큰 역할을 해 온 방산진흥회에 의한 "방진회사 (防振會史)" 등의 자료도 한국 방위산업 발전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³ 방위사업청 『2018년도 방위사업통계연보』, 2018년, p.216

것이다.

한국 국방정책 및 방위산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에 대한 연구성과가 많이 남아있다. 또한 방위 산업 탄생부터 40 년의 고비의 시기에 호조인 수출의 약진이 겹친 것을 계기로 그 도약까지 이르는 고난의 역사를 앞세워성과물이 많다. 한편 40 년 역사의 중간 점수인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성립전후를 중심으로 한 80년대 후반부터 노무현정부가 방위사업청을 창설하는 2000년대 초까지 대해서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적다. 박정희 정권에서 비롯된 전력증강사업 (올곡사업)말기인 80년대 후반부터 다시 방위산업이 약동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까지 정체기이다⁴는 지적이 있으면서도 연구자체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3. 냉전 체제 붕괴 전후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

(1) 국내 정치와 한미 관계의 변화

1980년대 후반 한국은 1961년에 박정희 육군소장(당시)들이 5.16군사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이래, 1987년 노태우 대통령후보(당시)에 의한 민주화 선언까지 30년 남짓 동안 계속된 군사 정권이 끝나고,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격렬한 사회 변동의 와중에 있었다.

제 13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는 군인 출신이면서 민주화의 길을 붙였으니 아니라 1988년 자국에서 열린 서울 올림픽을 무사히 마치고 개최국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대외 관계에서는 냉전 구조가 붕괴되기를 내다보고 전개된 "북방 외교"로 1990년 6월 소련과 국교를 맺고 중국과 1992년 8월에 국교가 정상화됐다.⁵ 소련이 1991년 12월에 붕괴되고 냉전 시대가 종언을 맞아 곧 그 해 1월에는 걸프 전쟁이 시작되고, 미군이 다국적 군을 구성하고 이라크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걸프전이란 중동지역에 대해 에너지를 크게 의존하는 한국이 경제발전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국제공헌을 할 것인가를 묻는 전쟁이었다. 흥미롭게도 당시 한국의 처지는 일본과 비슷했다는 사실이다. 냉전기에 북한과의 전쟁에만 전념할 것으로 상정됐던 한국의 국방정책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큰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도 냉전체제 붕괴 전후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한미 관계는 1969년 7월 리처드 닉슨 독트린 발표 1971년 미국 육군 제 7사단 철수, 1977년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 계획 발표 등 1975년 베트남 전쟁 종결을 전후로 양국 관계가 크게 흔들린 시점을 넘어 80년대 들어 다시 안정기에 들어서도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방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보조를 맞추듯 한국군에 대한 "주도적인 것"에서 서서히 "지원적인 것"으로 전환했다. 1985년 5월에 열린 제 1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 측이 연합 지휘 체제 개선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⁶ 냉전 체제 붕괴 후에는 미군의 전방 전개 전략 재검토의 영향을 받고 주한 미군 병력 감축 계획이 실행되어 1991년에는 오랫동안 한미 간에 현안이 되던 서울 중심부에 있는 주한 미군 용산 기지 반환이 확정되고 1994년에는 평시에 있어서의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이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에 반환됐다.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해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지 않게 된 한국은 미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원조를 받는 국가들로부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방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더욱 증강시켜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국제정세나 한미관계의 변화만이 우리가 스스로 방어에 부담을 늘리는 흐름을 가져온 것은

⁴ 유용원 「초심을 잊을 수 없는 좋은 취지를 되살려야 할」 『방위사업청 소식지 제 4호』 방위사업청 2007년 1월, p.4

⁵ 키미야 타다시 『국제정치 속의 한국 현대사』 아카카와 출판사, 2012년, pp.116-119

⁶ 국방부군사철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2013년, p.190

아니다. 냉전체제 붕괴 전후의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식민지 해방이나 한국전쟁의 참화로부터의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으로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꿈이 아니게 되었다. 점점 우리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강하다는 자존심도 작용해 "자주국방"을 요구하는 움직임의 순풍이 된 정도 지적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많은 국민이 군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군사정권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짙게 남는 시기이기도 하여, 불신으로 가득 차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광주사건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폭력장치로 기능해 온 역사에서 특히 진보세력에 있어서는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김영삼정부 시절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은 이 같은 국민 정서에 부응하기 위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2)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관계는 그동안 조선 전쟁 종결 후 일관하고 이어 온 긴장 관계를 바꾸고, 1991년 12월에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 조인되면서 더욱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한국에서 미국 전술 핵의 철거에 의해서, 일시적이긴 했지만 한순간의 융화가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런데 북한은 핵개발을 외교카드로 이용하면서 남북 대립이 격화됐다. 1993년 2월 25일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곧 그 해 3월 19일 북한은 갑자기 NPT 탈퇴를 선언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15일 "남북 간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의 3 단계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창하는 등 통일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⁷ 그에 반해,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심각화되자 남북관계는 단번에 냉각화되었다. 1994년 3월 열린 남북 실무 대표 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입에서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라는 말이 나왔다. 이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은 반발과 불안을 안게 되었고,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인 자세에 대해 엄정한 태도로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1995년 후반부터 98년까지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다 2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아사했다는 시기에 김영삼 정권은 핵 카드를 쓰고 벼랑 끝 외교를 펼치는 대북 대응에 고심하는 것이다.

(3) 전쟁 형태의 변화

냉전체제 붕괴 전후의 시기는 종래의 전쟁 형태에 변화가 초래된 시기이기도 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벌어진 포클랜드전(1982년)과 걸프전쟁(1991년)은 영국의 정밀 유도 무기에 공격이 큰 성과를 올렸다. 특히 걸프전에서 미군 주체인 다국적군에 의한 폭격 모양이 CNN 등에 의해 실시간으로 보도된 것보다 전세계에 대해 하이테크 무기의 위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규모 분쟁에서 하이테크화가 전쟁 형태에 있어서의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하이테크 무기가 필요 없는 비대칭전이나 저강도 분쟁이라는 개념이 표면화해 온 것도 이 시기의 군사를 둘러싼 개념 변화의 특징이다. 때마침 80년대는 북한의 표면화된 군사 행동이 정체하면서도 각종 테러 공격이 빈발한 시기였다. 북한은 국내 정치 기반이 취약한 전두환 대통령을 겨냥한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아시아 경기 대회를 앞둔 김포 국제 공항 폭발 사건 서울 올림픽 성공을 막기 위한 1987년 KAL 기 폭파 사건을 각각 일으켰다.⁸ 또 1996년에는 북한 무장 공작원이 특수 잠수함에 의해서 은밀히 한국 내에 침입하고 이를 소탕하려는 한국군과의 사이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다. 한국은 민주화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의 발걸음을 시작하여 군사정권 시절과 같은 강권적인 수법에 의한 국내 치안유지를 꾀하기 어려워졌다. 반면 북한은 비대칭전에서 남한을 도발하게 된 것이다.

4. 80년대 후반 한국 방위산업을 둘러싼 문제점

⁷ 신영석 『한국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편찬사』 아카시 서점, 2011년 6월, pp.221-222

⁸ 미치시타 나루시게 『북 벼랑 끝 외교의 역사』 미네르바 서방, 2013년, pp.21-22

(1)방위산업 생산 라인의 가동을 저하

1970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 과학 연구소(ADD)를 창설한 것을 시작으로 "자주 국방 정책"이 본격 시작됐다. 한국군 전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방위산업 기반 구축을 실시하는 통칭"울곡 사업"이 시작된 것이 1974년이다.그리고 10여년이 지난 80년대 후반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초 그린 자주 국방 체제의 주춧돌이 되는 방위 산업 기반 구축에 성공하고 소총 등 기본적인 장비뿐만 아니라, 전차, 항공기, 헬기 등 가지각색의 장비를 스스로 생산하는 능력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원래 본 사업은 북한과의 압도적인 전력 격차를 메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지상 병력을 가진 육군에 대한 장비증강이 중심이었다.그 증거로 울곡사업 예산 약 50%정도가 육상전력 확보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⁹

표-1 설비 이용률 변동 추이 (1990년-95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전체	66.6%	63.3%	61.8%	64.2%	69.3%	74.0%
방위산업	55.6%	56.9%	59.8%	54.2%	56.1%	56.0%

(出典) 「가동을 저하로 경영난」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6년, p.50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의 파도를 타고 방위 산업도 상승세로 성장했지만 한국군이 이들의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국내에서의 수요가 일순한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내 수요 감소에 의한 방위 산업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급격히 저하하고 낮은 상태였다(표-1"설비 이용률 변동 추이"를 참조). 이어 1987년부터 시작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노사 분쟁도 거세질 뿐이었다.¹⁰이에 따라 한국의 국내 인건비가 급등하여 한층 더 한국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촉진하게 되었다.당연히, 제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방위산업의 경영에도 타격을 주게 된 것이다.¹¹

한국 밖으로 눈을 돌리자, 냉전 후의 세계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면서도 잠깐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세계각국은 방위예산 삭감을 도모하고, 때마침 세계경제와 각국의 재정상황 악화도 겹쳐 세계적으로 방산시장 전체가 축소경향에 들어갔다. 한국도 예외 없이 이런 세계 추세에 휘말려 자국 방위산업의 경영환경은 악화되기만 했던 것이다.

(2)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

한국은 전차, 함정, 항공기와 같은 대형 장비까지 제조할 수 있게 됐지만 걸프 전쟁에서 최첨단 기술을 결집시킨 첨단 무기가 압도적인 힘을 보이자 한국 군 간부들은 자신의 기술력의 부족을 통감하고 자국의 장비의 새로운 근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최신 기술을 이용한 정밀 유도 가능한 타격 무기가 중시되는 시대에 돌입하자, 그때까지 생산에 주력해 온 전통적인 기본 장비품(소총·전차·자주포 등)에서 고도의 전자 부품에 의해서 형성되는 전투기나 정밀 타격 무기 등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자국의 방위산업이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치열한 경쟁에 이겨 나가기 위해서도 하이테크 무기를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획득이라는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으로부터 최신 장비품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방위력 향상을 위해, 자국제 장비품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한 것이다.

냉전체제 붕괴 후의 한국에서는 방위산업 국내시장이 수요 포화로 인해 방위산업업계를 중심으로

⁹ 広報処『변화와 개혁 김영삼 정부 국정 5년 자료집 ①(정치/외교/통일/국방)』, 1997년, p.595

¹⁰ 襄一成「국가 안보와 방위 사업」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8년 8월, p.20

¹¹ 李康旼「우리방위위산업한계 어떻게 극복해야하나?」 『국방과 기술』 한국방산진흥회, 1994년 7월, p.10

장비품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 방위 산업 장비 수출은 이미 1975 년(47 만달러)에서 시작, 1980 년까지 사소하면서도 상승세를 거친 뒤 1981 년부터 89 년까지 약 10 년간 이란 이라크 전쟁 특수로 연평균 1 억 4500 만달러의 방산 물자가 수출됐다. 1990 년 이후는 냉전 종식과 중동 지역 정세 안정으로 1991 년 걸프전쟁 수요를 제외하고 수출은 하강 국면이 됐다. 92 년부터 95 년까지는 동남아시아로 수출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게 되어, 수출지가 고착화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¹² 1995 년 시점에서는 방위산업의 연간 수출액이 7,698 만달러로 나라 전체 수출액의 0.06%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고 나머지 선진국과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¹³ 안승길에 따르면¹⁴ 90 년대의 한국산 장비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①고 임금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② 정부차원의 수출지원 기구의 정비, ③ 조직화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부족을 꼽는다. 당시 한국은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장비품 생산능력을 획득하면서도 그것을 유지하면서 오는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발전에 대한 기폭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이다.

(3) 장비품 수출시 대미 승인 필요성

이러한 한국 방위산업을 둘러싼 환경 요인 외에 한국이 장비를 제 3 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대미 승인"이란 높은 벽이 장비 수출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었다. 1989 년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만들어진 장비를 제 3 국에 수출할 경우 8%의 로열티를 미국 측에 지불하겠다는 양해각서(MOU)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제 3 국 수출 허가에 여전히 소극적이 되어 미국의 동의율이 그것까지 평균 80%를 웃돌고 있으면서, 1989 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표-2 를 참조).¹⁵ 한국의 방위산업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지원에 의해 초창기부터 발전시켜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의한 기술이전 승인의 필요성이 한국 방위산업의 가일층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표-2 제삼국 판매시 대미 동의 현황 (1987년-199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요청 건수	3	13	28	30	55	55	41	19	6	1
동의 건수	3	13	21	6	18	0	2	3	2	0
동의율 (%)	100	100	75	20	33	0	5	16	33	0

(出典) 安秉吉 「방위산업 국제협력과 수출추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국방과 기술 8월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7년, p.31

1990 년 전후 한국경제는 1960 년대의 "한강의 기적"에 의한 고도 성장기가 끝나고 이른바 "중소득 국가의 덩" ¹⁶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혁신과 산업구조개혁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획득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던 시기와 한국의 방위산업도 포함한 제조업 전체가 구조개혁과 보다 한층 더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직면했던 시기가 겹친다. 더욱이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해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한국형 수출전략품목 개발과 대미 방위산업 협력관계의 발전, 생산 및 연구개발 기반의 구축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큰 과제가 대두된 것이다. 백영훈에 따르면 ¹⁷ 1990 년 전후의 한국 방위

¹² 安秉吉 「방위 산업의 국제협력과 수출추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7년, p.24-25

¹³ 「가동율 저하로 경영난」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6년, p.49

¹⁴ 安秉吉, pp.28-30

¹⁵ 權泰榮 「한·미 방산기술 협력의 발전 방향(1)」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4년, p.34

¹⁶ 국민 소득 1만달러(중소득)을 초월한 국가가 그 후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을 지향하면서도 오랜 기간 경제가 정체하는 상태이다.

¹⁷ 白永勳 「전환기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과 경영전략」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1년, pp.61-62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① 방위 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의사의 퇴화, ② 국방 정책과 국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③ 국가 정책의 합리성 및 일관성 결여, ④ 방위산업 조달 규모의 한계와 시장 경직성 ⑤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가 충분하지 않고 ⑥ 연구기관의 협력 체제가 결여, ⑦ 고도의 방위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 계열화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 ⑧ 고도 방위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 계열화가 미흡하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던 90 년 전후의 한국 방위산업에 있어서, "대미 승인의 벽"은 독자기술개발 촉진을 큰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이 침체화한 80 년대에 자동차와 IT 기술 등 민생기술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¹⁸ 이들 민생기술의 힘은 그 후 한국 방위산업에서 활용되었으며, 2000 년대 이후의 약진에 연결되어 갔다. 이처럼 90 년 전후의 냉전 체제 붕괴 안팎에서 한국의 처지는 국제정치적으로나 국제 경제적으로 국내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냉전체제로 구축된 기존의 개념이 전환되고 있는 전환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1980 년대 후반부터 장비 수출 필요성이 외치면서도 결국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이 이뤄진 것은 약 20 년 이상도 나중에 노무현정부가 2006 년 1 월 방위사업청이 창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¹⁹

5. 맺는 말

한국의 방위산업진흥책은 단순한 국방정책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중요국가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기반 건설과 병행하여 스스로를 지킬 장비품을 제조하는 기반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공에 의한 안정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한국군에 의한 국내수요가 감소하자 방위산업 전체의 가동을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해외시장 적극전개도 미국 기술 유래의 장비품수출 승인의 필요성이라는 큰 벽이 가로막혔다. 심지어 최신 하이테크무기를 만드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이 80 년대부터 90 년대까지 한국 방위산업이 정체된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 후,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획득과 미국 기술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도모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하고 있는 차기전투기는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전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의 핵심기술이전을 거부당한 한국은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독자 개발하기를 고집하고 있다. 미국 기술 유래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장비품 가격의 일정 비율이 미국 등에의 라이선스료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하고 있다. 때마침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남북화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에 요동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의 정치관계에 주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양국 관계 줄다리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향후 한반도의 파워밸런스를 점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끝)

¹⁸ 정진태 『방위사업학개론』, 21 세기북스, 2012 년, p.162

¹⁹ 방위사업청의 창설에 대해서는 와타나베 타케시 「방위 사업청의 개혁」 『브리핑 메모/NIDS 코멘터리 제 41 호』 방위연구소, 2014 년 12 월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

참고 문헌

[일본어문헌]

키미야 타다시 『국제정치 속의 한국 현대사』,야마카와 출판사, 2012 년.

미치시타 나루시게 『북 벼랑 끝 외교의 역사』,미네르바 서방, 2013 년.

와타나베 타케시"김영삼 정권기의 위협 인식의 이원화 - 삼군의 균형 발전과 주적 개념을 놓고" 사와키 마사유키, 쿠라타 테츠야, 히라이와 순지 편 『한반도와 국제정치 - 냉전의 전개와 변용』 게이오 기주쿠대학 출판회, 2005 년.

[한국어문헌]

한국방산진흥회 『국방과 기술』

홍보처 『변화와 개혁 김영삼 정부 국정 5년 자료집 ①(정치/외교/통일/국방)』, 1997 년.

홍보처 『변화와 개혁 김영삼 정부 국정 5년 자료집 ④(대통령 편, 일지 편)』, 1997 년.

국방부 『국방백서 1993~1994』, 1993 년.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 1994 년.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1995 년.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 1996 년.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1997 년.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1998 년.

국방부 『국방백서 1999』, 1999 년.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 1998 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2013 년.

정진태 『방위사업학개론』, 21세기북스, 2012 년

신영석 『한국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편찬사』 아카시 서점, 2011 년.

서우덕·신인호·장심열 편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한국방위산업학회, 2015 년

차영구·황병무 편저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오름, 2004 년

방위사업청 『2017년도 방위사업통계연보』, 2017 년.

방위사업청 『2018년도 방위사업통계연보』, 2018 년.

略 歴

이토 코타로

[學歷]

- 2001년 : 추오대학 종합정책학부 정책학과 졸업(종합정책학사)
- 2004년 : 추오대학대학원 종합정책 연구과 박사전기과정 종합정책 전공 수료(종합정책 석사)
- 2017년 : 추오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정치학 전공 박사후기과정 학점취득만기퇴학

[経歴]

- 2006년 6월 : 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오피서
(~2007년 6월)
- 2007년 6월 :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 리서치 어시스턴트 (~2008년 8월)
- 2008년 9월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주니어 리서치 펠로 (~2009년 8월)
- 2010년 1월 :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2014년 12월)
- 2015년 1월 : 내각관방국가안전보장국 참서관보좌 (~2017년 6월)
- 2017년 7월 :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 2017년 7월 : 추오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2018년 4월 : 슈쿠토쿠대학 커뮤니티정책학부 겸임강사
- 2018년 4월 : 리츠메이칸대학 공통교육추진기구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양성
특별프로그램"프로그램 어드바이저 (~2019년 3월)
- 2018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방문연구원 (일한문화교류기금 방한연구
펠로) (~2018년 9월)
- 2019년 4월 : 리츠메이칸대학 공통교육추진기구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양성
특별프로그램" 객원준교수